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2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이정애, 한근수, 한송연,
김영실, 김지훈(국), 김동훈,
이경숙, 박윤옥, 이진환,
박은경, 정현미

1. 제안 이유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민원 업무 관련 보험·공제 가입 대상 범위를 각 분야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 서비스 일선에 있는 공무원 보호 정책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나. 조례 목적 현실화(안 제1조)

다. 보험·공제 가입 대상 확대 규정(안 제2조)

- 주민등록 관련 업무
- 인감 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 가족관계 업무
- 여권 및 여행증명서 업무
- 차량등록 관련 업무
- 지적 관련 업무
- 지방세 관련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등

라. 보험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
입 조례”를 “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
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
· 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입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4. 가족관계 업무
5. 여권 및 여행증명서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 관련 업무
8. 지방세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제3조제1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인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u></p> <p>2. <u>“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u></p>	<p style="text-align: center;"><u>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민원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가입대상) <u>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u></p>

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의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4. 가족관계 업무
5. 여권 및 여행증명서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 관련 업무
8. 지방세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료의 지급)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그 밖에 -----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 해당 -----

-----.

②-----

----- 해당 민원
업무담당공무원-----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그 밖
에 -----
--.

②-----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

- 2024년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예산(2,400천원) 기확보하여 집행 (민원담당관)
 - 지원범위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여권, 읍·면·동 민원팀 세무업무
- 차량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예산 (2,000원) 기 확보하여 집행(자동차관리과)
 - 지원범위 : 차량등록
- 지적업무담당 배상공제 보증보험 예산(960천원) 기 확보하여 집행(토지정보과)
 - 지원범위 : 지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을 추계 할 수 없음.

4. 작성자

민원담당관 김선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2022. 1. 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호출장치 ·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 · 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으로 고소 ·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 ·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 ·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